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案)에 대한 다섯가지 우려와 대책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Korea) 고위원탁회의 건의문(案): 요약

2015년 6월 26일

SDSN-Korea 고위원탁회의

대표 양수길

고위자문회의 의장 이흥구

회원총회 회장 김영길

정부가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UN기후변화협약(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가 출범시키고자 하는 신(新)기후체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된 203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시나리오 네 가지는 모두 기존의 감축정책을 대폭 후퇴시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SDSN-Korea의 고위원탁회의 위원들이 대체로 공유하는 다섯 가지의 우려를 표명하고 동 목표안의 재산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7년에 걸쳐 정부가 제시해 온 국제적 공약을 철회함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 우려됩니다.

둘째, 대내적으로도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고 그 결과 특히 녹색혁신과 창조경제의 열기가 식어갈 것이 우려됩니다.

셋째,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변환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청되는 과제가 기후변화가 2°C를 초과하지 못하게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입니다. 정부의 Post-2020 감축목표안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에 대한 “응분의 기여”에 못 미치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것은 윤리적 소명과 민족적 자긍심의 문제이고 또 국제적 리더십 차원의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후손들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넷째, 세계 주요 배출국들은 역사적 책임론과 무관하게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거의 영화(零化)해나가야 합니다. 7대 배출국인 한국도 이에 따라 장기 배출 감축량과 감축경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2050년까지 요구되는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의 경로를 적정화하는 ‘심층저탄소화경로(NDDP)’로부터 INDC를 역산(backcasting)하는 분석방식의 틀에서 볼 때 2030년 이후를 고려하지 않은 2030년까지의 BAU기반 감축목표 설정방식은 ‘뒤로 미루기’ 식의 감축시나리오로 귀결되어 2030년 이후의 감축을 어렵게 하고 경제와 산업에 실로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다섯째, 신기후체제에서는 에너지절약과 청정에너지가 국제경쟁력의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어 산업구조의 탈탄소화 경쟁이 전개됩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경쟁대상국인 중국이 선진기술을 도입하며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에 한 걸음 앞서 가야합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우리 에너지집약산업의 공동화는 적극적 공격

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으로 초래되기 보다는 오히려 소극적 방어적 감축에서 초래될 것이 우려됩니다. 지금부터 선제적 산업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산업의 녹색혁신노력을 배가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능동적으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추진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정부의 6월 11일자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위의 다섯 가지 우려를 신중히 검토해 감축목표안이 새로이 도출되고 특히 산정 과정과 논리 및 통계자료들이 국내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에 대해 전문가차원의 토론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아가 연구 및 토론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과 분석역량을 동원해 2050년까지의 ‘국가심층저탄소화경로(NDDP)’를 도출해 INDC의 산정, 분석, 평가에 활용해야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INDC 제출을 그 시한인 9월말까지 미루더라도 향후 약 2개월(7~8월)에 걸쳐서 감축목표 재산정 작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